

한국 내 보혁갈등의 성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등장을 중심으로-

백종국(경상대학교)

1.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역사의 선택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보면 마치 19세기말의 조선을 보는 것과 같다. 체제의 변화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정파의 입장이 이데올로기화함에 따라 적절한 역사적 선택을 실천할 기회를 상실하고 허둥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현재 두서 없이 전개되고 있는 소위 보혁갈등(保革葛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허동현이 그의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는 책에서 소개한 바를 보면, 당시의 위정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 조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고종이 그의 칙명을 받고 일본 시찰을 다녀온 대표단에게 일본의 대 조선 정책에 대해 물었다. 그 때에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조준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최근에 각국은 오직 강약으로만 서로 겨룰 뿐 인의(仁義)로서 책하지 않습니다. 설령 좋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약함을 보면 도리어 나쁜 뜻을 품으며, 설령 악의를 가졌더라도 강함을 보면 반드시 수호(修好)하려 합니다. 현재 사세로는 우선 자수자강(自修自強)에 힘을 따름입니다.”(허동현 1999, 309)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나라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차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각 당파는 바로 목전의 권력 쟁탈을 위해 강대국을 끌어들이고 이를 위한 “사대(事大)”와 “개혁(改革)”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벌이므로 조선은 멸망하게 되었다. 흥미있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때와 유사하게 외세를 의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소위 보혁갈등(保革葛藤)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몰입하므로 자수자강(自修自強)의 기회를 찾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크게 보아 해방 직후에서 한국전쟁 전까지, 그리고 4월 학생의거에서부터 5·16 군사 쿠데타 이전까지 두 시기에 전형적인 보혁갈등을 겪었다. 이 보혁갈등의 성격과 그 결말을 역사적 관점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여정부 하에서의 보혁갈등이라 불리우는 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는 상호적이어서 때로 피차의 원인이나 결과

가 된다. 본 논문은 참여정부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보혁갈등(保革葛藤)은 권력구조의 변동이 초래한 극단적 히스테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의 두 시기처럼 본격적인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아니라 30여 년 간을 지배해온 소위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의 붕괴 혹은 권력의 상실로 인한 감정적 공황이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형태의 보혁갈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 내의 보혁갈등(保革葛藤)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논리의 일관성(logical consistency)이라는 기준과 법치(the rule of law)의 관철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처방을 몰라서 한국이 보혁갈등(保革葛藤)의 질곡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의 의의를 더욱 간곡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이라고 본다. 이 논문의 의의는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의 확장에 있다.

2. 한국 사회 내 「보혁갈등(保革葛藤)」의 역사적 전개

최장집의 견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사회집단이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가치판단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관념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장집1989, 171) 그러나, 이러한 최장집의 정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데올로기는 가치판단의 기능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적 실재의 파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예컨대, 군사독재자들이 그들의 정적을 “공산주의자”라거나 “빨갱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군사독재자들의 태도를 “반공주의”라고 부를 때에 그들의 정적이 진실로 공산주의자나 혹은 자신들이 반공주의자나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들의 관심사는 그렇게 낙인찍으므로 혹은 찍히므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란 개인적 혹은 집단적 권력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허위의식이라고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있는 사람들 자신은 이러한 정의에 대해 매우 유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확실히 한국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란 용법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생각은 정의되지 않는 그 무엇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이라고 규정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경향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첫 번째 「보혁갈등」은 아마도 1945에서 1950년 사이에서라고 보여진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해방된 조국을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이냐는

1) 예컨대, 「한국논단」의 발행인인 이도형의 글은 그 제목부터가 “한국에 ‘이념’이 어디 있나 선·악의 대결뿐이지”이다. 「한국논단」 kforum.co.kr/bbs/view.php?id=all&no=115. 반면에 맑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장상환은 그의 “좌파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좌파는 좋은 사람이고 우파는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장상환 2000, 177)

문제에 몰두해있었다. 대체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동구의 공산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상적·폭력적 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들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사상 중 어느 것도 한국 사회에서 그 구체성을 검증받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 사상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사상이 구체성을 상실할수록 더 급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이들의 사상이 그토록 접점을 찾기 힘든 양상을 띄었는지, 왜 이들이 그토록 자신의 진영에서조차 성급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보혁갈등」은 남북분단이라는 요소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을 미국이, 북쪽을 소련이 점령하여 각자의 점령지에 피보호국(Client State)을 건설함에 따라 이 점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가혹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남북분단이 초래한 한국전쟁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한국전쟁은 남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지지자들을, 북한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지지자들을 일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학준 2003, 398-400) 남한에서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는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로 간주되고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어떤 사상이나 정책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가 건설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보혁갈등」이 나타난 두 번째 시기는 4·19 학생의거라고 말할 수 있다. 1960년 4월 19일에 그 정점을 기록한 학생들의 의거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퇴출시키고 허정의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부터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1년 5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는 보혁의 갈등이 재기되었다. 김광식의 연구에 따르면 이 학생의거에 혁신세력은 주도자가 아니라 수혜자였다.(김광식 1990) 학생의거를 주도한 초기세력은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중시하는 중도적 학생세력이었고 이들은 이승만이 물러나고 허정이 정부를 구성하자 학원으로 복귀하였다.²⁾ 반면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혁신세력들은 십 여 개의 자생적 단체를 조직하여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보혁갈등」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일소되었다.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고 선언하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집권층보다는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던 혁신세력을 더 철저히 탄압하였다. 혁신세력의 실패는 이미 다양하게 분석된 바 있으나 요약하자면 “매개의 변증법”에 빠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지세력도 없는 급진적 구호들은 혁신세력으로부터 대중을 괴리시켰으며 그럴수록 혁신세력의 모험주의적 행동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혁신세력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해준 민주화의 흐름

2) 김광식은 「혁신세력」에 대해, “‘혁신’이라는 말은 분단 이후부터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갖는 개념의 문제는 확연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의미의 다의성에 있다. 다만 보수세력에 반대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이념의 프리즘을 통하여 본다면 민주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다.(김광식 1990, 192)

을 교란하여 군사쿠테타를 끌어들이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3. 참여정부 하 보혁갈등의 본질 : 권력 상실의 극단적 히스테리

앞의 두 시기와 견주어 볼 때 1990년대의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보혁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많은 언론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갈등을 『보혁갈등』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혁신적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손호철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노대통령은 개혁적 자유주의, 개혁적 보수세력이지,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현재 한국의 정치에서 진보세력은 노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며, 지난 대선은 진보세력이 한국정치에서 초보적인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념적 3정립구도’가 자리잡는 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손호철 2003, 2)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최장집도 한국 사회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있다”고 한탄하는 상황이다.(최장집 2002, 9)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보수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에 보수주의라고 부를만한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병훈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보수주의 논쟁은 알맹이 없는 허상과 수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병국 외 1999, 98) 보수주의라는 개념의 서구적 용법과 역사를 고찰한 김용민은 한국 사회에 과연 보수주의라고 할만한 게 있는가 라고 묻고 “없다”고 답변한다.(김병국 외 1999, 46)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주의란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집권세력과 구구세력, 기득권자, 보수적 중간층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구도를 파악할 때는 “이데올로기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라는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의 획득 혹은 감정적 해소를 이유로 타도하고 싶은 상대방을 “공산주의자”라거나 “빨갱이”라고 낙인찍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군사독재자들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에게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선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잔재는 군사독재자들이 몰락하고 나서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2002년 말에 출범한 참여정부 자신이 부정하고, 혁신세력들 다수가 참여정부의 보수적 성격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부를 “빨갱이” 혹은 “노동당2중대”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불러내기’가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보혁갈등』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 기준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이 정부를 혁신적이라고 부르고 있고, 혁신 세력들은 이 정부를 보수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성격은 이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12대 국정과제 중 “자유롭고 공

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은 이 정부가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혼합경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공약과는 확실히 다르다.(장상환 2000, 182)

참여정부의 정책 내용을 혁신적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정책 내용이 참여정부의 정책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안정된 일자리, 상생의 노사” 등으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제의 성격에 대한 전제는 거의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통일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교류협력 강화 등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이도형의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을 유지할 만한 전통이나 권위있는 가치체계가 국민적 총의로 보존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사회적 정치적 유기성이나 연속성을 살릴만한 정치적 보수주의는 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이도형 2003, 1)

만일 이도형의 주장이 옳다면 현재 언론들이 보혁갈등(保革葛藤)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도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인사들에 의해 잘 서술되고 있다. 박효종은 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늠하는 현실적 잣대가 된 것이다”고 결론짓고 있다.(박효종 2003, 1) 이철승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그는 “색깔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애국 애족의 기준이라고 단언하고 있다.³⁾ 마치 중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부가 수구파와 개혁파의 기준이었듯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보혁갈등(保革葛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느냐가 문제라면 한국의 보혁갈등(保革葛藤)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은 어떤 태도가 국가이익(國家利益)에 더욱 부합하느냐는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간

3) “우리 건국, 호국, 애국세력들은 빨갱이와 혈투로써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빨갱이의 6·25 남침 때 인민군과 싸워 대한민국을 밥술이나 먹게 만들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같이 빨갱이들이 권력을 쥐고 국가예산으로 친북 시민단체를 키우며 최고의 간첩인 송두율을 불러들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이철승 2003, 2)

주하고 미국을 혈맹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보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미국과 사이에는 대등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견해의 차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둔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나 타협이 가능하다. 실제로 진보주의적 참여정부와 보수주의적 야당 사이의 정책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러나, 현재의 보혁갈등(保革葛藤) 양상이 이러한 타협과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도형이나 이철승의 주장에서 잘 나타났듯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주장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어떤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⁴⁾ 뿐 아니라, 참여정부 자신이 구태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를 반미친북주사파 정부라고 공격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정적 요소가 이들의 주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감정적 요소의 발견이 현재 언론들이 보혁갈등(保革葛藤)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한 분석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하의 보혁갈등(保革葛藤)은 그 대부분이 권력의 상실로 발생한 “극단적 히스테리(hyper-hysteria)”에 기초하고 있다. 이철승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밥술이나 먹게 만들은” 세력은 “우리 건국·호국·애국 세력”이었다.(이철승 2003, 2) 백종국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력은 “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백종국 1993, 133) 1960년대 초의 혼란을 기화로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들은 정부주도, 수출대체산업화, 외자도입, 후발효과의 극대화, 강력한 노동통제 등의 정책을 통해 눈부신 물질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 세력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천민자본주의적 세력으로 타락하면서 이 세력은 도덕성과 활력을 잃고 마침내는 정치권력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혁갈등은 바로 이러한 권력 상실의 히스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권력상실의 히스테리는 그들이 한 번 쯤 참고 견뎠던 김대중 정부의 뒤를 동일한 성격의 노무현 정부가 이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폭발하게 되었다. “5년만 참으면 되지”하는 다짐을 배신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또 다른 5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도형의 주장에 따르면, “이회창이 두 번씩이나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진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TV의 최면에 걸려 악화를 양화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도형 2003, 2)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권력 상실이 이 갈등의 핵심에 놓여있다.

이 권력의 상실로 인한 히스테리는 단지 감정적일 뿐 아니라, 마치 조선조의 봉당간 투쟁이 보여주는 바처럼, 실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이병갑 1995) 한국 사회는 천민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법질서가 아니라 연줄망을 통해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체제로 타락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에서 10여년 이상의 긴 권력 상실은 영향력있는 연줄망의 상실이며 이는 개개인의 위신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4) “김대중 집권 후 이 빨갱이들이 부활했다. ...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려면(오늘의 번영을 지속시키면서) 이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늘 혼란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이도형 2003, 2)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멀지않아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과거 30여 년 간의 기억과 함께 소위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히스테리를 촉발시킨 외부적 요인 중 하나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의 정 반대 편에 서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과거 4월의 학생의거로 민주 체제가 등장하자 이 국면을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으로 사용한 것처럼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 결과로 민주적 체제가 등장하자 과거와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행태를 부활시키고 있다. 예컨대 채만수와 같은 이들은 민주노동당조차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정도이다.(장상환 2000, 132) 이들은 독재 사회에서의 질서에 대한 부정과 민주 사회에서의 질서에 대한 존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존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강경한 투쟁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들이며 한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⁵⁾

급속한 민주화로 인한 참여폭발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1960년의 4월 학생의거 시기와 1980년 소위 서울의 봄 때에도 그러했거니와 1997년 이후의 민주적 정부 등장으로 대중적 차원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과도한 독재 체제 이후에 오는 민주체제 내에서는 참여의 폭발이 종종 목격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종류의 참여 폭발은 민주화를 숙성시키기 보다 새로운 종류의 권위주의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곤 했다. 예컨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정당한 논의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방화를 일삼는 행위가 증대하고 있다. 때로 민주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으나 불안 사태와 같이 극단주의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의식적 거부가 권력의 상실로 괴로워하고 있는 세력들의 우려와 히스테리를 증대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4. 참여정부 하 보혁갈등의 해결방안

1) 논리적 일관성(logical consistency)이라는 기준

현재의 보혁갈등 국면이 피차에 어떤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면 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적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의 보수세력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면서 스스로를 보수의 원조라고 부르는 이철승이 이끄는 자유민주민족회의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

5) 만일 정치가들이 강도 없는 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그 없는 다리를 부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보수가 아니라 매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자신이 인정하듯이 얼마 전 까지 한국 정치체제는 군사독재이었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벗어나고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은 분명히 진보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릴 보고 냉전적 또는 보수적이라 비판하는데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온 우리야말로 진정한 진보”라는 이철승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말 뒤에 “군사독재자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바람에 반정부세력이 성장, 우리 보수 우익더러 행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신동아 2000년 9월호) 같은 시간에 제시한 진술에서 ‘진보’와 ‘보수’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논리의 불일치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⁶⁾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위 “보수적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들, 예컨대 사상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 것도 논리적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라 할찌라도 단지 그것이 그의 사상 혹은 사상적 활동이기만 하다면 법적으로 이를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라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집회와 결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리가 수시로 변하는 모습은 극좌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아직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적인 주제로 떠오르지 않고 주한 미군의 핵배낭 배치만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극좌적 인사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이 이제는 핵주권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보편적 기준인 인권의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군사독재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비판하지만, 북한의 공산독재가 야기시키는 인권유린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이를 일반화하면 매우 많은 감정적 주장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감정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라 할찌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내세우려하기 마련이다. 합리성의 인준이야말로 해당 주장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피차에 잘 알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감정적 태도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지만 가급적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 내에 머물므로써 그 합리성과 지지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경우에 깊은 논리적 토론보다는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기준, 즉 논리의 일관성을 적용하므로 이데올로기의 편협함을 빨리 이해시킬 수도 있다.

6) 최근 대통령 재신임 정국을 둘러싸고 발생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언론의 입장 불일치가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10월 10일자 사설에서 “국정 공백 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를 명백히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신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고 난 뒤인 10월 13일자 사설에서는 “재신임 받아 무엇하려 이려는가”라고 개탄하고 있다.

지식인의 공정한 역할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박효종은 “순리적 비합의(reasonable disagreement)”에 입각한 “경쟁적 민주주의”를 통해 현재의 보혁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효종 2003, 5) 서로 다른 세계관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민주적 합의를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제는 박효종이 이처럼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합의와 사상적 입장에 대한 관용의 정신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민주적 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박효종은 간과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한국의 보혁갈등을 북아일랜드의 신구교갈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갈등으로 상정하고 있다.(박효종 2003, 2) 이처럼 무리한 논지가 전개되는 이유가 사실은 논리적 일관성조차 갖지 못한 주장들을 단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논리적 일관성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차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정치적 주장은 어느 정도 논리의 비약이나 배반이 있기 마련이다. 만일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관된 논지의 전개를 현실 세계에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데올로기적 태도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논리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 목격되는 경쟁적 주장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경우 양비론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뿐 아니라 도리어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보다 덜 논리적 불일치가 발견되는 주장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2) 법치(法治 : the rule of law)의 관철

만일 현재의 보혁갈등이 어떤 이념적 내용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권력의 상실에서 오는 회한과 분노 때문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감정적 갈등이 계급갈등과 연계되면서 사회 전체를 들끓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빈번히 발생하였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면밀하게 관찰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법치(法治)”를 제시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하면, 법이란 “모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을 의미한다.(Aristotle 1969, 146)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방종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자유와 평등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정치는 폭민정(暴民政)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산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지닌 사회는 현실 가능한 사회 중 최고의 형태이다. 만일 적대적인 계급이나 파당이 서로 다른 정의 관념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주는 법적 체계의 존재가 바로 감정적 파당의 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중재자이다.

대한민국 제27조 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이란 원칙의 실천은 법치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In dubio pro reo)이란 검찰의 기소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나서야 죄인으로 취급된다는 원칙이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단지 소문에 불과할 찌라도 이를 너무 빨리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인용이 지적한 바처럼, 현재의 보혁갈등 국면을 주도하는 몇몇 신문들은 그들의 보도 자체가 중요한 권력 자원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3-10-15) 물론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보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한국의 시민들이 단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무죄로 인정해준다면 언론을 장악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정 또한 중요하다. 자신의 권력적 목적을 위해 혼란을 조장하려는 자들은 흔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인정하려 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통해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은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자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대표가 공공연하게 이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⁷⁾ 자신이 혹은 자신의 과당이 승리해야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면 법치(法治)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서처럼 법적 절차 자체가 피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개정조차도 피치자의 동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민주적 체제 하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을 타당하지 않다.

공정한 법적 질서의 인정과 실천은 누구에게나 유리하다. 누구에게나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적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특히, 지금까지 군사독재 하에서 자신의 시민적 권리는 고사하고 생존의 조건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크게 위안이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더욱 희망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 지지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가 보장이 된다면 미래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현재 과거에 누렸던 정치 권력을 상실하고 격분에 휩싸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된다. 대체적으로 군사독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잔인함과 그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권력을 쥐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시대를 그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고 공정한 법질서가 보장되면 자신들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체제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 체제를 붕괴시킬만한 갈등은 초래되지 않는다.

7)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월간 조선』의 편집장인 조갑제는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반역정권 타도는 가능한가”(12월 22일), “장교단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12월 29일)이라는 글을 쓸 정도이었다.

5. 결론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재 몇몇 정책적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당파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무슨 보혁갈등(保革葛藤)으로 부를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해소하려하기 보다 보다 더 심각한 갈등의 국면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태도들이 사회 일각에서 준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태도의 기초에 권력 상실의 히스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말은 보혁갈등이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태도를 찾기가 힘들다. 물론 민주적 체제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러한 히스테리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의 경험이 이러한 히스테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여지나 이미 상당히 민주화된 현재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보혁갈등이라고 부르는 갈등의 해소책으로 본 논문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기준과 법치의 관철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이 보여주는 논리적 불일치를 지적하므로써 불필요하게 격앙되어있는 감정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성의 회복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최고의 명약이다. 법치(法治)의 관철은 각 당파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책이다. 연줄망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법 절차의 실천은 이 연줄망 자체를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회복하거나 장악해보려는 세력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준다. 이 점은 특히 한국처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실천되어본 적이 없는 사회에서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광식. 1990.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등장과 활동”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서울: 한길사), 182-213.
- 김병국 외. 1999. 『한국의 보수주의』 서울: 인간사랑.
- 김석근 외. 1999.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김육. 1994. “한국 사회 갈등 구조의 다변화 : 의미와 대처방안.”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91-106.
- 박종민. 1991. “정치적 이념과 갈등 및 정치적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전과 한국정치』 309-335.
- 박효중. 2003. “보혁간의 ‘순리적인 비합의의 정치’를 위하여”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6/200306230239.html.
- 백종국. 1993.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에서 천민자본주의적 지배연합으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 정치·사회의 새흐름』(서울: 나남, 1993), 133-176.
- 손호철. 2003.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 진보시각”
www.chosun.com/w21data/html/news/ 200306230238.html.
- 신동아. 2000. “‘보수’는 반격을 노린다”
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9 /nd2000090010.htm.
- 이도형. 2003. “한국에 ‘이념’이 어디있나 선·악의 대결뿐이지”
kforum.co.kr/bbs/view.php? id=all&no=115.
- 이병갑. 1995. “체제유지 정책과정에 있어서 봉당간의 이익갈등 분석 - 16세기 정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85-497.
- 이철승. 2003. “(안보) 색깔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www.newsjoa.com/news _view.html
- 자유평론사. 1987. 『한국의 좌경사상과 민중이데올로기』 서울: 자유평론사.
- 장상환. 2000. 『진보정당을 말한다』 서울: 책벌레.
- 최장집. 1989.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2001.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서울: 사회와 연대.
- 허동현. 1999.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서울: 당대.
- 허만호. 1994. “이념갈등과 통일정책 관계 : ‘민중통일론’의 제도적 수용성.”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931-962.
- Aristotle. 1969. *The Politics of Aristotle, Edited and Translated by Ernst Barker*.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약력

백종국(白鍾國 : Jong Gook Back)은 외대 서어과와 서울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UCLA 정치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고대, 이대 등의 강사를 거쳐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멕시코혁명사」,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등의 저서와 많은 연구논문들이 있다. 기독시민단체 활동에도 열심이며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공동대표와 공의정치실천연대의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이다.